



## 2005 정기국회에서 관철해야 할 농업정책 핵심과제 요약

한농연은 200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로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농민중심적인 양정제도 개선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 추진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개혁 ▲수입농산물 검역체계 및 국내 제도 개선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농민참여 보장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농연은 이상 제시한 농업정책 핵심과제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350만 농민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하여 반드시 대책수립과 입법,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국** 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2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인 쌀 문제를 비롯하여 여야의원들은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의 처리에 앞서 공공비축재 확대와 고정직불금 인상 등 농민피해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9월 15일(목),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철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는 9월 22일부터 농림부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농해수위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의 성의있는 대책 수립과 입법활동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농업정책 전반을 감사하면서 잘못된 정책 수정과 새로운 농업정책 도입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을 감시함은 물론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림부를 비롯한 농업 대상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중 우수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1

###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 2000년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조기상환시 인센티브를 제공
- 정책자금 신규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하고 농협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차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대책도 마련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2, 3차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하며, 무이자 용자그룹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농신보의 보증 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에 향후 5년간 8천억원 이상 지원, 현행 농신보 보증 제도를 농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

- 정부의 대손보전기금 폐지 방침을 반대

## 2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의 ha 당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실제 영농중인 임차농 보호를 위하여 임차료 상승 방지책 등을 마련하여 임차농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
- 밭농업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도입하되, 고추·마늘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부터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소득안정직불제를 실시, 중장기적으로는 밭에 대해서도 고정형 및 변동형 직불제를 도입

## 3 농민중심적인 양정제도 개선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 국제정세 급변 및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비축 목표를 1천만석으로 확대
- 매년 5백만석씩 수매하여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
- 정부 수매곡 2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민간업자들의 적극적인 수확기 매입을 유도
-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예산을 확보
- 중국산 전쌀 및 MMA 가공용 쌀의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의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

## 4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 추진

- 농협중앙회 기능을 조합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조합발전 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도모

- 농협중앙회의 조직·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기능 강화를 추진
- 농협 계통 구매사업 전환, 조합 경제사업 지원, 기초생산자조직 강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지도금융 시스템 확립, 상호금융 대출·연체금리 및 예대마진을 인하 등 농업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회원조합의 규모화·전문화 및 경영 건전화를 위한 합병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인 조합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무자격조합원 정리 및 조합원 참여율 제고
- 조합 경영의 투명성 확대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조합장 선출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장 자격요건 및 출마요건을 강화
- 임직원 인사제도 및 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경영에 맞는 급여체계를 구축

## 5

###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개혁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변경(시장도매인제 전면 도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함
-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생산자(농민)대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 대책 추진
- 우리쌀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지원 강화
- 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
- 밀수 적발 농산물은 폐기 혹은 제3국으로 재수출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 홍보 강화
- 외국산 농산물 종자 로열티 지출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미끼상품 사용 대응책 마련

## 6

### 수입농산물 검역체계 및 국내 제도 개선

-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중점적인 관리 추진,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내 식품공장 등에 대한 현지 조사와 대응책 마련 필요
- 수입농산물 검사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검역업무를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도입
- 농산물표시제도의 정비 및 강화 추진
- 식품 수출입 관련 정부의 외교력 강화
- 유해식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중간판매상, 소매상,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 강화

## 7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농민참여 보장

- FTA 추진시 사전영향분석, 대상국 선정, 국내대책 마련, 협상 진행 등에 대한 농민대표의 참여 보장 및 진행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향후 농업통상협상 진행시 농민단체의 참여를 보장
- 농민단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된 가칭 '통상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8

###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 급식, 무상 급식' 원칙을 관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시행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이의 제정 및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